

조선대 로스쿨 탈락설 충격

“도대체 잣대 뭐냐” 경악·분노

인구 비례·균형발전 어떤 기준에도 맞지 않아  
조선대측 “아직 확정 안돼 발표 기다려 보겠다”

29일 교육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대학 명단에 조선대가 빠지고, 광주광역시 로스쿨에 전남대·전북대·원광대 등 3개 대학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주 지역이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이 위치한 데다 법률 수요가 훨씬 많은 광주에 전북보다 적은 수의 로스쿨이 유치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광주·전남과 전북의 법조시장 규모가 역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조선대 측은 일단 “믿을 수 없으며,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더 기다려본다”는 입장이다. 조선대 관계자는 “청와대 보고 자료에 조선대가 빠졌다는 것을 들었지만 최종 결정은 아니기 때문에 낙담하긴 이르다”며 “마지막으로 1~2곳은 더 선정될 수 있다고 한 만큼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내는 이들도 있다. 조선대 법대 한 교수는 “인구 비례에서 보나 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힘의 논리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최병근 공보이사는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결과”라며 “합격자 수나 전통, 시설, 장학금 조성 노력 등 모든 면에서 조선대가 빠질리 없는데, 정치적인 편가가 있지 않고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이같은 결정은 막바지에 이른 노무현 정부의 이성을 잃은 판단으로 대통령을 지지한 지역민들에 대한 배신이기도 하다”며 “광주 전남 시·도민들이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양형일 의원은 “도저히 납

득할 수 없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평가기준·접수 등 모든 것을 점검해서 문제점이 나타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낙연 의원은 “광주·전남의 겨울 공화국이 시작되는 것 같다. 최근 정부의 일련의 정책을 보면 호남 배려의 진정성을 전혀 느낄 수 없다”면서 “당 차원에서 문제제기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철 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정원 조정을 하더라도 전북 2개, 전남 2개로 해야 한다. 광주·전남과 전북을 분열시키려는 처사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최인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광주·전남 학생수와 시도민 수를 보더라도 전북 2곳, 광주 1곳 선정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당 차원이나 상임위 차원에서 강력한 문제제기가 이뤄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조선대의 로스쿨 유치 실패는 광주 지역경제에도 파급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광주상공회의소 이승기 회장은 “ 그동안 로스쿨 유치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온 지역 사학이 탈락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정확한 인가 기준이 무엇인지를 묻고 싶다”고 밝혔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화양 관광단지 기공식 참석 문선명 총재 문선명(오른쪽 두번째) 통일교 총재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문 총재는 29일 여수 화양지구내 청해수련원 야외광장에서 열린 ‘화양 관광단지’ 기공식에 부인과 함께 참석했다. 행사에 참석한 이강래 국회의원,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황선조(주)일상해양산업 회장, 박준영 전남도 지사(앞줄 왼쪽부터) 등이 박수로 환영하고 있다. /위정락기자 jrwi@

■낙후지역특별법 등 국회 통과 난망

광주·전남지역 미래를 견인할 ‘3대 법안’으로 꼽히고 있는 낙후지역 특별법(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에 관한 특별법), F1 특별법(포틀랜드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광주과학기술법(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 법률안)이 17대 마지막 임시국회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낙후지역 특별법=김진표 대통합민주신당 정책위의장과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임시국회 법안처리 문제와 관련, 상호 논의를 갖고 법사위에 계류중인 낙후지역 특별법에 대해 유사법안과 병합처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이 병합처리를 원하는 법안은 지난 2005년 12월 권경석 의원이 발의한 낙후지역개발촉진특별법안.

‘서남권 개발계획’ 상당부분 수정 불가피

한, 유사 법안과 병합·연계 처리 주장  
총선 한나라 압승 땀 장기 표류 우려

그러나 전남 서남권의 발전을 위해 정부의 SO C 투자와 민자 유치를 골자로 하는 낙후지역특별법과 일반적인 낙후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는 낙후지역개발특별법은 상이하다.

두 법안이 병합처리된다면 참여정부가 낙후지역 특별법을 기초로 지난 연말 발표한 ‘서남권 개발계획’은 상당부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원안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F1 특별법·광주과학기술법=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두 법안을 정점 법안으로 규정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의 조정을 통해 통과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전남 서남권 개발(J-프로젝트)특별법은 현재 문광위 계류 상태다. 한나라당이 광주 특별법(세계역사문화도시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의 연계 처리를 주장하며 법안 통과에 협

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맞서 대통합민주신당은 광주 특별법이 통과되면 광주문화수도 조성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연계처리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팽팽한 팽팽선을 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의 정치적 타협점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F1 특별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광주 과학기술원에 학사과정을 설치하도록 한 광주과학기술법은 현재 과거정위에 계류된 상태지만 한나라당이 느닷없이 광주 특별법 처리와 연계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하게 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조성위 폐지는 문화수도 축소”

김종민 문광부 장관

김종민 문화관광부 장관은 28일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이 안정될 때까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조성위)는 2~3년 더 활동해야 한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중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폐지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오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김 장관은 “조성위가 폐지된다고 문화도시사업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는냐”는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의 질의에 대해 “(조성위원회 폐지를 담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대로 조성위를 폐지하고 실시계획심의위원회를 조성심의위원회로 대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또 “조성위 폐지는 사업에 대한 정부 의지 축소에 비쳐질 수 있으며 문화도시사업의 위상과 성격에 영향을 미쳐 사업차질을 빚게 할 수 있다”며 “조성위를 폐지하고, 대신 문광부장관이 심의 조정 기능을 갖는 것으로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문광위 2문화수도조성위 존폐 공방

“부처간 협조도 힘들어져”  
“위원회 없어도 사업 계속”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이하 조성위) 폐지 법안과 관련, 28일부터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이날 오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조성위 폐지에 반대하는 대통합민주신당 측과 찬성하는 한나라당 측이 찬반 공방을 주고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유선호 의원(신당)은 “조성위는 미래형 문화도시 발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동안 많은 실적을 냈다”며 “따라서 조성위 폐지는 설립 목적 완료와 운영실적 미미 등을 기준으로 한 인수의 정부위원회 폐지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조성위 폐지안을 보면서 인수가 마치 문화중심도시 사업을 국가사업이 아닌 지역사업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단호히 폐지에 반대하며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조성위를 폐지하면 국가 역량을 모을 수 없고 부처 간 협조도 어려워질 것이다”고 말했다.

지병문(신당) 의원은 “조성위는 문광부 장관이 다른 부처의 의견과 협력을 구하는 조직이자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듣는 기구다”며 “조성위를 폐지하겠다는

본은 조성위가 무엇을 하는지를 따져보지 않고 접근하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의 내용과 취지를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무지의 소치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은 또 “문광부장관이 재정부 장관 등과 협의해서 구두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안 지키면 그만이다. 하지만 조성위에서 협의해서 방범으로 정하면 강제력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조성위의 역할이다”고 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재웅(한나라당, 부산 동래) 의원은 “조성위를 폐지한다고 문화도시사업 자체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며 “오러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반격했다. 그는 나

아가 “문화도시 사업은 이미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국가적 과업으로 인정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문광위 전체회의에 앞서 문광위 김종민 수석전문위원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부처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협력을 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약화되므로 문화도시 종합계획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용이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송파청솔에 오면 왜 이를 악물고 공부하는 걸까? Naver 송파청솔학원, 청솔기숙학원. 24시간 특별관리 남부기숙/죽전기숙 대입 재수 정규반. 2009 대입 재수 정규반. 송파본원, 청솔기숙남부분원, 청솔기숙죽전본원.